"전북도민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 보완"

이명연 도의원 대표 발의 '전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국가 · 지자체 설치 복지시설 수탁 운영 등 수행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1, 환경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환경복지위원(이병철 · 김대오 · 김만기 · 나기학 · 진형석 · 황영석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지난 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명연 의원은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등 민간 시장의 확대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인권 침해 문제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높아지면서 서비스의 품질 및 공공성 · 투명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 · 보완해 도민들의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사회서비스원'은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운영,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무 · 회계 · 법무 · 노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지원사업 ▲각종 사회서비스의 통합 제공 및 표준운영 모델 개발 · 보급 ▲재가서비스를 수행하는 종합재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정관(제7조)에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위임하는 대신 사회서비스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이 작성 또는 변경될 경우 도의회에 보고(제8조) 하도록 규정했다.

전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시기는 2021년 7월이고, 1본부 3팀(경영기획팀, 시설운영팀, 민간지원팀) 20명이며, 종합재가센터 및 수탁시설 인력은 별도로 운영된다.

수탁시설 운영비는 추가 지원 없이 시설별로 현행처럼 자체 수입(보조금 등) 내에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이다.

한편, 전북도 사회복지시설은 2020년 12월말 기준 전체 3,183개소, 종사자 2만4,024명이며, 국공립시설 비율은 218개소 6.8%, 국공립시설 종사자는 2,831명으로 11.8%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서울, 경남, 경기 등 10개 시.도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 운영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인권 존중받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위해'

국주영은 도의원, '갑질 행위 근절 ·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토론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더불어민주당, 전주9) 의원은 지난 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국주영은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 송성재 노조위원장과 김민재 사무총장을 비롯해, 농업기술원 및 의회사무처 지회 회장 ·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주영은 의원은 "갑질 행위에 대한 개념과 처벌,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미비해 갑질 행위를 근절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건전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갑질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 가해자로 부터 신고자의 차단 및 보복금지,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변보호, 가해자 인사조치 등 현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조례제정에 대한 관심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례를 제정 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 및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가 근절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엇보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구축돼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북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2021년 제1차 임시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었다. 사진은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영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제도 마련할 것"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 비대면 영상회의서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돌입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2021년 제1차 임시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시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이달중으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송지용 의장은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만큼, 인사위원회 구성 등 조례안의 제 · 개정이 필요해 현행 제도 분석 및 대응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송 의장은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원 관리와 직급문제, 의정연수센터 설립 등 하부적으로 살필 법령이 많다"며 "전북도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진단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용역 결과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하위법령 개정 및 관련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오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유호상 기자

전주 서신동 학생 위한 '사랑의 운동화 전달식'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 비례대표)이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을과 기업 간 가교역할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운동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3일 전주 서신동주민센터 1층 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가 주관한 '사랑의 운동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전주시 서신동 지역 내 5개 학교에, 1개교 당 5명의 학생에게 운동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의장 주인구)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최 의원은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마을과 기업 간에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이날 처음 열린 전달식이 빛을 발했다.

최영심 의원은 "이번 전달식으로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돼 보람있다"며 "앞으로도 전달식이 지속되고 대상 학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에 교육종사자 포함돼야"

이용호 의원, "교내 감염, 집단감염 '연결고리' 될 가능성"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 · 임실 · 순창)은 3일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에 교육종사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지원 방안'을 언급하며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에는교육종사자가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가 교내 감염전파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방역당국이 학교 감염 비율이 2.4%에 불과하다는 논문을 맹신한 것인지는 몰라도, 전국에 초등학교 1, 2학년만해도 90만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아이들과 밀접 접촉하는 교육종사자들을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 교육계 종사자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교육 현장에서 방역활동과 생활지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염두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부는 매일 등교와 등교 인원을 늘리겠다는 발표만 하고, 교육종사자를 우선 접종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역당국 간 협의는 이제서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발 감염유행은 학생이었던 구치소 교도관의 자녀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1,9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교내 방역인력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매일 등교를 확대하려면 기본적으로 교내 감염예방 대책도 병행 ·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교내 감염은 가족은 물론 해당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되는 집단감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김윤덕 의원, LX 법 대표발의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국토정보 서비스 향상과 함께 SOC 디지털화를 통한 글로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갑)은 3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그동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스마트 국토 정보사업을 통한 국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공간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사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과 기관의 혁신 성장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명확한 설립목적,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